

칼럼

장기채 주필



‘고령사회’ 패러다임 이대로 좋은가

고령화는 선진국, 개발도상국 가릴 것 없는 세계적인 추세다. 프랑스는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진행하는데 115년이 걸렸고,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데 40년이 소요될 예정이다.

독일은 각각 40년과 37년, 미국은 73년과 21년이 걸렸다고 한다.

2006년 이미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일본은 24년과 12년이 경과됐다. 한국은 고령사회 18년, 또 초고령사회로 가는데 겨우 8년이다.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만큼 빠르다.

우리 사회의 고령화가 유독 심각한 것은 선국과 달리 충분한 경제성장도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초고속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노령화 현상은 한마디로 ‘압축적 고령화’라 할 수 있다. 빠른 속도만큼 문제점들이 응축돼 있는데도 국가적 사회적 대비는 어처구니없을 정도로 허접투성이었다.

무엇보다 지금 우리 노인들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가난뱅이로 인정받고 있다.

실제로 고령자 절반 가량(48.1%)은 빈곤층이다. 그런데다 지금같은 저출산 현상이 지속된다면 2030년에는 OECD평균 25.8%를 훨씬 뛰어넘는 38.2%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인류사회는 인구가 그렇게도 원하던 장수사회를 이룩했다. 그러나 장수사회의 도래는 생산인구의 감소와 부양인구의 증가라는 새로운 문제를 불러 일으켰다. 다시 말하면 세계적인 급속한 노령인구의 증가는 노동력 감소, 저축률과 투자율의 감소를 야기했다.

예컨대 1950년경의 아시아원 노인인구는 5760만 명으로 4.1%에 불과했다. 하지만 2050년이면 9억2270만 명에 이르러 전체인구의 7.15%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생산인구가 줄고 고령층이 늘어나다보니 노인부양은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됐다.

노년 부양비는 2010년 15.2명이지만 2040년에는 57.2명, 2060년에는 80.2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여기에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재정지출이 늘면서 국가재정

에 부담을 주게 되고 노인 빈곤은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 지역사회, 법정부 차원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따라서 과연 한국의 노인들은 위기에 처해있는지 자녀들은 부모를 모시려하지 않는다.

이런데도 우리의 사회안전망은 여전히 부실하기만 하다. 이런 상황에서 병들고 버림받은 노인들이 스스로 세상을 떠나고 있는 것이다.

이시대의 노인들은 격동의 대한민국 근현대사를 관통하며 온갖 고통과 역경을 극복한 세대다.

부모에게 효(孝)를 행한 마지막 세대이자 자식들로부터 효를 받지 못하는 최초의 세대이기도 하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그들에게 엄청난 정신적 물질적 부채를 지고 있다.

때문에 노인복지에 관한 문제는 당연히 정책순위의 상위를 차지해야 한다. 따라서 노인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고령사회’의 운명 패러다임도 바뀌어야 한다는 뜻

이다. 결코 노인인구가 늘어나면 기업의 생산성이 줄어들면서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각종 사회보험 운영에 구멍이 생긴다. 돈을 내는 젊은이는 적고, 돈을 타가는 노인만 많으면 보험이든 연금이든 지속 가능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예컨대 한국사회의 급속한 고령사회 진행은 젊은이들의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있기에 더욱 심화되고 있다. 저출산 대책이 본격화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정부는 66조5637억 원을 쏟아 부었다. 출산율을 높여서 고령화를 저지하리란 이미 때가 늦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따라서 균형잡힌 저출산 고령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준비는 간단치 않다. 그래서 더 치밀하고 배려깊은 대책이 필요한 것이다.

독일자동차회사 BMW의 사례는 눈여겨 볼만하다. BMW는 신체 기능이 저하된 고령자를 위해 무릎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나무 바닥재를 깔고, 조깅을 더 밝히고 작업장에 확대경을 설치하는 등 크고 작은 70여개 조치를 취했다.

비용은 5만 달러, 5000만 원 조금 넘는 돈이 들었다. 변화는 놀라웠다. 무엇보다 결근율이 크게 줄어들고 공장의 연간 생산성은 7%가 높아졌다.

BMW는 역시 일류기업이라는 사실이 확인된다. 고령화에 대비한 혁신인 셈이다.

社 說

광주경제자유구역 지정 환영

빛그린산단 첨단3지구, 도시첨단산단, 에너지밸리 등 광주권 4개 지구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됐다. 자동차, 에너지, 인공지능(AI) 등 미래 먹거리 산업의 요람이 될 곳이다. 더욱이 이번 지정은 지역 최초 경제자유구역이라는 상징성도 크다. 우리나라는 2003년 인천과 부산·진해, 광양만권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였으며, 2차로 2008년 황해(경기 평택)와 대구·경북, 새만금·군산을 지정해 총 6개의 경제자유구역을 운영하고 있다.

광주 경제자유구역은 이용섭 시장의 민선 7기 1호 공약이다. 경제자유구역은 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규제완화 등 유리한 경영 환경과 생활여건을 조성해 투자유치를 촉진하고자 정부가 지원하는 특별경제구역이다. 이번 지정은 광주경제의 비약적 성장과 함께 글로벌경제시대 경쟁력을 확보하는 계기가 됐다. 광주시가 구상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 조성사업은 빛그린산단 184만7천㎡와 남구 도시첨단산단 143만㎡, 광주공항 820만㎡ 등 1천147만7천㎡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조성해 12조원 규모의 일

자리 뉴딜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다.

광주시는 빛그린산단을 자동차 특화산단으로 만들어 친환경 스마트카를 선도하고, 도시첨단산단은 에너지저장장치(ESS), 스마트그리드 등 에너지산업 특화산단으로 육성하며, 광우역 부지와 주변 지역은 혁신을 주도하는 랜드마크로 조성한다는 복안이다. 또 전남도와 협의해 광주공항을 이전하고 그 부지에 스마트시티나 국제적 놀이시설 조성 등 광주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 대규모 프로젝트도 구상중이다.

이번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계기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광주를 인공지능 허브도시로 육성하고 지역 전략산업과 인공지능을 연계해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를 촉진하려는 광주시의 발걸음이 한층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의 투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만큼 광주시가 대규모 외자 유치를 통해서 경제의 활로를 열고 시민들의 삶도 한 단계 높여 주기를 기대한다.

생활정보전화

- ▲ 이주여성 긴급전화 1577-1366
- ▲ 응급질병상담 1399
- ▲ 미아·가출인 신고 182
- ▲ 여성 긴급전화 1366
- ▲ 청소년 상담 지원센터 1388
- ▲ 아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 ▲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 ▲ 응급의료센터 1399

긴급전화

- ▲ 기상예보 131
- ▲ 법률구조상담 132
- ▲ 인광 알코올 상담센터 222-5666
- ▲ 광주 남성의 전화 673-9001
- ▲ 광주 여성의 전화 363-7739
- ▲ 수도고장신고 121
- ▲ 전기고장 신고 123
- ▲ 가스사고 신고 383-0019

<p>등록번호 광주 0021 (일간)</p> <p>호남신문</p> <p>대표전화 (062) 229-6000</p> <p>광고국 (062) 224-5800</p> <p>기자재보 (062) 971-7400</p> <p>팩스 (062) 222-5547</p>	<p>회 장·발행인·편집인 김 평 호</p> <p>편집국장 직무대리 서 선 옥</p> <p>본 사 :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p> <p>서울 취재 본부 :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로62가길 16-1</p> <p>Tel (02) 2238-0003</p> <p>인터넷 호남신문 www.i-honam.com</p> <p>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 쇄 (주)남도프린테크</p> <p>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p>
--	--

평행선이 아닌 동행하는 사람

기차 레일처럼 결코 만날 수 없는 평행선과 같은 관계는 인간관계에서 가장 불행한 존재이며 동행의 정반대이기도 하다. 같은 방향을 가지지만 다른 생각과 다른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처럼 불행한 것이 또 어디 있었는가?

우리는 이런 삶이 아닌 같은 곳을 같이 바라볼 수 있는 동행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가정이나 직장에서도 마찬가지로, 평행선 같은 일을 한다면 의욕도 없고 진취적이지 못하며 후퇴하는 일을 한 것 같을 것이다.

살아가면서 포기나 망각이 아니라 변화를 위한 적극적인 의지가 원망이나 복수심을 버리기 위해서는 그만큼 자기 내면의 성숙이 필요하고 내면의 성숙은 그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단한 의지가 있어야 할 것이다.

필자 역시 지난 일들을 생각해 보면 누군가를 원망하면서 힘들어 하면서 살았지만 생각하면 본인만을 옥죄고 힘들게 하는 것임을 알면서도 훌쩍 털어버리지 못하면서 과거에 묻혀 살아온 일들이 많이 있었다. 아찌 다른 사람

의 마음을 알아서 용서하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 모두가 귀한 사람받고 살아야 하기에 서로를 이해하고 감싸주고 도란거리며 사는 세상이면 좋겠는데 지나간 과거를 잊고 살 수 있을까 생각해 본다. 시간 지나 버려진 초대권을 갖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사회생활이나 직장생활이나 사람 만나면서 좋은 일도 있는 반면 그와 반대로 나를 힘들게 하고 이해타산으로 평행선이 되는 것이 허다하다.

살아가면서 평행선이 아닌 동행할 수 있는 그런 너그러운 마음을 가질 수는 없을까?

필자 자신부터 상대방을 마음 마음으로 대하지 말고 좋은 말과 행동으로 남을 칭찬해 주며 비하하거나 비방하지 않는다면 본인은 존경받는 동행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하지만 계획했던 일들이 하나씩 어긋나기 시작할 때에 좋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드물 것이다.

우리는 어려운 때에 가장 힘들 때에도 고난을 나타내기보다는 긍정적인 모습을 갖는다면 평행선을 걷는 사람이 아닌 함께 동행하는 생각이 먼저 싹틀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

광주북부소방서 현장지휘담당 국종균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이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무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특히 자본권력의 횡포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독자생존 체제를 구축해 나간다는 차원에서 작은 변화를 시작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왜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 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된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